

전남 해변 불법매립·무단 점사용 1943건 전국 최다

전국의 65% ... 대부분 어민·영세상인 물양장 등 생계형 사례 집행 어려움

바닷가 불법 매립과 무단 점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전남지역에서만 19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바닷가 불법 이용 건수의 65%에 달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경북 구미)이 해양수산부와 11개 시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바닷가 불법이용 실태 점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공유수면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2988건이었다. 이 중 불법매립이 1044건, 무단 점사용

이 1944건이었다.

전남은 1943건(전남도 1939건, 여수해양수산청 3건, 목포해양수산청 1건)이 적발됐으며 불법매립 729건, 무단점사용 1214건이다.

특히 장흥군 회진면은 기존의 허가지역 외 무단으로 3822㎡를 불법매립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부지는 현재 미역공장이 들어서 있으나 지자체는 불

법매립 경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광양시 태인동 제방 바깥쪽 2280㎡로 불법매립됐다.

전남도가 적발한 1939건 사례 중 불법매립 415건, 무단점사용 783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의무면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남 다음으로 충남 275건, 경남 210건이 적발됐다.

'공유수면관리법'은 무단점사용, 불법매립과 같은 바닷가 불법이용에 대해 변상금 징수, 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집행비용 징수)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충남·경남 등에 집중된 불법 이용 사례의 대다수가 어민, 영세상인들의 공동작업장, 물양장, 선가대, 어구적치장, 상점 등 생계형 사례로 파악돼 법 집행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바닷가 불법이용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합동단속,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단기간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2018년까지 전체 바닷가 불법 이용 2988건 중 불법매립 585곳, 무단점사용 1325건, 총 1910건에 대해 원상회복 및 의무면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현권 의원은 "바닷가 불법매립의 경우 매립 후 원상복구가 쉽지 않은 점, 바닷가의 생계형 무단점 사용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유수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산단 폐열 농축산 재활용 60억 들여 연구 개발 본격화

전남도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해 버려지는 폐열 등을 축사 난방과 탄산농법에 재활용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본격 나선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지역 온실·부생 가스 자원화 사업'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온실·부생 가스 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여수산단 등 광양만권에서 대량으로 발생해 버려지는 폐열과 온실가스(CO₂)·부생가스(CH₄)를 비닐하우스·축사 난방과 탄산농법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자원을 농가에 공급하는 지역 공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3년간 60억원을 투입하며,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연구개발지원단이 기획관리 전담 기관으로 나선다. 조만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기관도 공모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병선 전남도 혁신경제과장은 "광양만권은 세계 최대 규모 제철소와 여수 석유화학산단이 있어 많은 양의 온실가스와 폐열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증연구 부족으로 버려지고 있다"면서 "생활밀착형 과제이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탄소농법 실용화, 저렴한 난방료 등을 실현하는 혁신적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남북통일 염원 대동놀이 1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읍민속마을에서 열린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한 전국 15개 시도 대표팀과 이북5도 대표팀, 관람객들이 함께 남북통일 염원 대동놀이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특정 인맥 챙기기' 논란

이 시장 정치기반 광산지역 인사 산하기관에 잇따라 채용 일부 인사 업무 파악 미흡도

광주시가 이윤섭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특정 지역 인사들을 시 산하기관에 잇따라 채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 시장의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광산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이들이 대부분으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채용된 기관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광주시가 최근 공개 채용한 청소 등 공무원직에는 20~30대 구직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광주시가 '시장 인맥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지역 청년들은 "무슨 일이든 하겠다"며 이력서를 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 공직자 챙기는 광주시=14일 광주시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복지재단 사무처장에 A씨,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에 B씨가 각각 임명됐다. 이들은 나란히 광산구청에서 근무하다 서기관(4급)으로 퇴직했다. 또 광주시장에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는 채용된 C씨는 광산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윤섭 당시 광주시장 후보 캠프 안팎에서 선거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각 기관 사무처장은 주도적인 업무를 맡아야 하는데 일부 기관에 채용된 '광산 인맥'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요직을 '낙하산'이 차지하면서 승진 길이 막힌 내부 직원들의 허탈감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의원 D의원은 "광산은 이윤섭 시장의 정치적 기반이며, 지난 선거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 시장을 후원한 곳"이라면서 "이 때문에 광주시의

'광산 인맥 챙기기'가 계속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D의원은 또 "몇몇 기관에 자리 잡은 '광산 인맥' 중 일부는 맡은 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서류에 도장만 찍는다'는 불만소리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퇴직해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산하기관에 다시 채용해 고액연봉을 주는 것은 명백한 보은 인사"라고 덧붙였다.

◇광주 청년, '무슨 일이든 하겠다'=광주시가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청년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일자리지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광주지역 청년층의 고용률은 36.3%였다. 이 지역 청년층 고용률은 전국 평균 42.1%보다 낮다.

2018년 1분기 기준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광주가 9132명으로 2017년 1분기보다 14.7% 증가했고, 2017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광주가 20만 9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6.9%이며 2010년보다 11.8% 늘었다. 2016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격자는 광주가 2만 4329명으로 2011년보다 1.7% 증가했다. 청년 일자리가 없어 비정규직은 늘고 아예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비율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최근 광주지역 청년들은 청소 등 공무원직에 몰리고 있다. 실제 광주시공사가 최근 영락공원, 망월묘역, 영주골프센터, 진곡화물차고지, 실내수영장 등지를 청소하는 공무원 6명을 뽑았는데 경쟁률은 4.8대 1에 달했다. 공사는 20~30대 청년층의 지원이 많아 전체 채용인원 6명 중 절반인 3명을 20~30대로 채웠다.

또 지난 6월 광주시가 시립도서관 청사미화원 뽑았는데 30~40대의 지원이 많았고, 채용된 6명 중 절반인 3명이 30~40대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베일 벗는' 경도 1조원 투자계약서

전남도의회 상임위서 공개 특혜 논란 잠재울 지 주목

베일에 싸여있던 전남개발공사와 미래에셋의 1조원대 여수 경도관광개발 투자계약서가 공개된다. 그동안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아 일었던 특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4일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전남도·전남개발공사·전남도의회는 계약서 공개 방침에 따라 시기·방법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공개 시기는 15일부터 열리는 전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도의회와 개발공사는 이 기간 특정 날짜를 협의 중이다.

공개 대상은 개발공사와 미래에셋 간 여수 경도 토지·시설·사업권 매매 계약서, 개발마스터플랜 초안 등 1000쪽에 이르는 관련 원본 서류 전체다.

계약서는 변호사 입회 하에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이 열람하기로 했다. 일부 내용을 외부

에 구두로 전달할 수는 있지만, 계약서를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유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계약서를 열람할 의원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동의서나 확인서를 제출받을 수도 있다.

개발공사는 이에 앞서 6쪽 분량의 계약서 요약본을 의원들에게 미리 배포하고, 12월 마스터플랜 확정을 앞두고 그동안 경도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회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 대상이나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계약서가 사본 형태로 유포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전남개발공사 측은 해명했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월 매매 계약 이후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아 미래에셋 측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결국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개발공사는 임시회 기간 이후라도 소관 상임위 의원의 열람 요청이 추가로 있으면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민간 기업과 계약서를 적나라하게 공개한다는데 여전히 부담은 있지만 불필요한 의혹을 없애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보건복지부

NPS 국민연금공단

후원기관 119
 힘겨울 땐 **129**

정년은 짧고 노후는 길다!
진짜 인생은 만 65세부터!

부모님 어깨승천 프로젝트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9월부터 월 최대 25만원 지급

*기초연금 수급시에는 월 최대 1.1만원 이동통신 요금이 감면됩니다.

기초연금 상담전화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이동통신 요금감면 국번없이 114(이동통신사)

북지로

북지로 홈페이지 신청접수 <http://www.bokjiro.go.kr>